

POLITICS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강기정 시장, 월요대회

“실증 사업 범위 확대...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

강기정 광주시장 ‘실증도시 광주, 광주에서는 다 됩니다!’를 주제로 ‘43번째 월요대회’를 진행했다.

강 시장 주재로 지난 10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한 월요대회에는 장범석 ㈜BS소프트 대표, 홍원택 엔에이치네트웍스(주) 이사, 이지훈 씨니백토리 대표, 송광철 엘탑 대표, 김민현 모비텔 대표, 지혜빈 이퓨얼드 대표, 김승연 파이이버스터렘 대표, 이화정 디어더어 대표, 손여정 ㈜명신메디칼 실장, 김강 ㈜세연이앤에스 대표, 이병국 ㈜동이기술 대표 등 실증사업 관계자들과 주재의 광주시 경제창업국장, 손두영 광주시 미래산업총괄관, 송병호 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장, 용승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회에서는 광주시에서 추진한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참여 배경, 성과, 어려움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실증도시 광주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실증도시 광주에서 기업하면 좋은 점’에 대해 광주시-공공기관-대기업 지원-협업, 적극적인 행정 지원, 고객 확보, ETRI·GIST 등 우수한 연구기관, 협업-홍보, 판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지원, 인재 확보, 실리온벨리 부럽지 않다 등 다양한 답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또 산업 실증사업의 성과 공유, 지하철 등을 활용한 광고 지원, 실증 후 완성품 제작 지원, 해외 실증 등을 위한 후속 지원 사업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실증지원 대상 쿼터제 도입, 실증지원 유형 다양화 등 앞으로 추진할 광주형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의 방향성도 모색했다.

강기정 시장은 “실증사업의 범위를 확대했고, 국내 기업들이 광주에서 마음껏 실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실증에서 판로 개척까지, 광주에서 타 도시-해외까지 나가는 실증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창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광주형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파면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1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 단식 및 천막농성’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단식에 삭발·천막 농성까지... ‘尹 탄핵’ 총력전

국회 민주당 의원들 이어 지역 정치권도 투쟁 선언 구속 취소 강력 규탄...헌법재판소, 신속 결단 요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식과 삭발, 농성, 집회 등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인 민주당 김준혁·민형배·박수현 의원과 진보당 양종오 의원 등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법원의 윤 대통령 직권 재구속, 국민의힘 정당 해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오늘부터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김문수 의원은 “삭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절박한 외침을 전하고자 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 야당 의원으로서, 부당한 현실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이 머리를 깎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제가 가진 것이 이 육신의 비록 머리칼이라도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주실 우리 국민과 온갖 옥설과 협박에도 헌법

수호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탄핵 인용을 결정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바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에서 전막 농성을 시작하며 매일 심야까지 비상행동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수별로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선인 김민석, 박병계, 박홍근, 서영교, 정경래 등 13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불안과 국가 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의원들(주요 3선)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5·6선 의원 9명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편지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과 민주화운동 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강력 규탄하며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천막 농성에 나선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검찰청이 설립된 이후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법원의 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란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비해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유지를 위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마땅하다”며 “내란 우무머리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게 만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응당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하루속히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이대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대통령 파면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역 7개 대학 민주동우회로 꾸려진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도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 석방은 사법체계의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을 비롯한 법 기술자들을 총동원해 순간 위기를 벗어나도 해도 내란 심판은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시계바늘이고, 국민 주권의 명령”이라며 “내란 우무머리가 파면되고, 줄개들마저 쓸어버릴 때까지 비상 행동에 돌입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라며 탄핵 인용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확대 2600명에 서비스...제공기관 진입 장벽 낮춰

광주시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꾸쳐로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1000여명에게 제공했던 서비스

를 올해는 2배 이상 늘려 2600명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장벽도 낮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하

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말까지 총 10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을, 올해는 2600명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의 자격 기준을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을 33㎡에서 16.5㎡로 축소, 진입장벽을 낮춰 제공기

관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시는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지역 등록 제공기관 70% 이상에 대해 현장 점검을 추진,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Wee 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민이다. 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국

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시민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19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전문적인 1대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장승기 기자 sky@

지방정가

대형사고 심리지원·상담 활성화 박문욱 도의원 발의...안건소위 심사 통과

전남도의회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 박문욱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목포3·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 등을 위해 ‘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한편 일상으로의 조기 회복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남도 차원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단 운영과 심의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재해구호법에서도 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도지사가 지명하는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 구성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 체계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예기치 못한 재난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도 남길 수 있다”며 “피해자 등이 하루빨리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항일 역사현장, 전남 활력소 탈바꿈 차영수, 강진 4·4만세운동 중요성 강조

전남도가 4·4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역사 유적 보존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사진)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전남의 항일역사를 알리고 유적지를 역사교훈여행(다크 투어리즘) 등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은 “전남은 일본의 주권 침탈과 수탈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싸운 독립운동의 숨결이 오늘날 자랑스러운 역사 유산으로 남아있으나 아직 알리고 보존하는데 부족함이 크다”며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전남 최초 대규모 항일운동이었던 4·4독립만세운동을 우리 손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들은 독립만세운동 유적을 보존하고 역사교훈여행 상품으로 개발해 후세에 교훈을 주는 관광자원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문화관광의 성공 사례들과 같이 항일운동 관광 패키지로 개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우리의 항일역사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자긍심과 정체성의 원천이며 전남의 전통문화 또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함께 연계할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은 전남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농자재 가격 폭등, 정부 지원해야” 신승철 도의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용”

신승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사진)은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질 비료 등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정부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작(水稻) 작·논에 물을 대 짓는 농사) 무기질 비료 가격이 평균 5.9% 인상됐고 일부 품목은 최대 6.7%까지 가격이 올랐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비료 가격도 함께 올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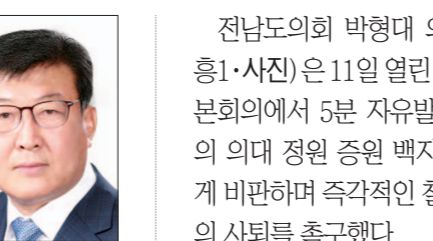
올해 정부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민기를 앞둔 농민들은 전년 대비 25%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 이란 등의 원자재 수출 규제 로 비료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신승철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요소다”며 “농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된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을 복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 철회 촉구 박형대 도의원 “전남의대 무산위기 우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사진)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증원 백지화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관련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000명 축소한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지만,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며 “작년 의료 대란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에 달하고 정부 재정도 3조3000억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도민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학통합 등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구두 약속 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역시 지역경제, 필수인사재원뿐 아니라 공공의대까지 포함한 종합적 공공의료 전략을 마련해 전남도의 의대 신설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규 기자

